

서남해안 지역 하구 오염 심각

광양서천·여수 연화천 등 9곳 '불량' D등급 판정

영산강·섬진강 생태계 국가차원 관리 대책 시급

전남 서·남해안 바다와 인접한 하구 지역 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 바다와 접해 있는 하구 오염도

가 불량(D)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하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국내 바다와 인접한 463개 하구 중 81개 하구에 대한 부착 생물, 저서 생물, 어류, 식생 분포 상황 등을 분석해왔다.

전남의 경우 영산강·섬진강에서

서·남해안 바다로 이어지는 광양서천, 연동천 등 9개 하천은 녹조 등 부착 생물에 대한 평가가 '불량' 등급인 D 판정을 받았다.

여수시 율촌면에서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연화천은 식생 부분에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하구의 경우 수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부착·저서 동물의 생태계 건강성이 D등급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공업지대, 농경지, 도심 지역에 인접한 서해권역의 경우 인구 분포 및 토지 이용도가 높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하구 일대가 무분별한 산업 개발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주목, 하구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中어선 불법조업 '꼼짝마'

단속 전담 1149t 어업지도선 내일 취항식

서남해안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전담할 국가 어업지도선(무궁화 25호·사진)이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갈수록 흉포화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정작 인원 확충은 이뤄지지 않아 '반쪽'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7일 오전 최첨단 장비를 갖춘 어업지도선 '무궁화 25호' 취항식을 갖고 서남해안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궁화 25호는 1149t으로 길이 68m, 너비 12.4m다. 시속 17노트, 정원 27명인 지도선에는 10m급 고속단속정(2정)을 비롯, 원격감시장치, 주·야간 관측 시스

템 등 첨단 장비가 탑재됐다. 어업지도선 확충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내놓은 ▲단속인원 30명 추가 확보 ▲어업지도선 4척 확충(12~15년) 등 '불법 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단속 인원 확충 계획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배만 늘려놓고 단속 인원은 보강하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17일 열리는 취항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학자금 대출 연체 분할상환·손해금 감면 혜택

'프리워크아웃' 시행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가 신용유의자로 빠지기 전에 분할상환·손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반학자금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학자금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손해금 감면 등

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체가 6개월 이상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이후에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이나 신용보호상담센터(☎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학폭' 학생부 미기재 전북교육감 경찰 조사

전·현직 교사 30명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미기재한 전·현직 교사와 이를 지시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김 교육감과 전·현직 교사 3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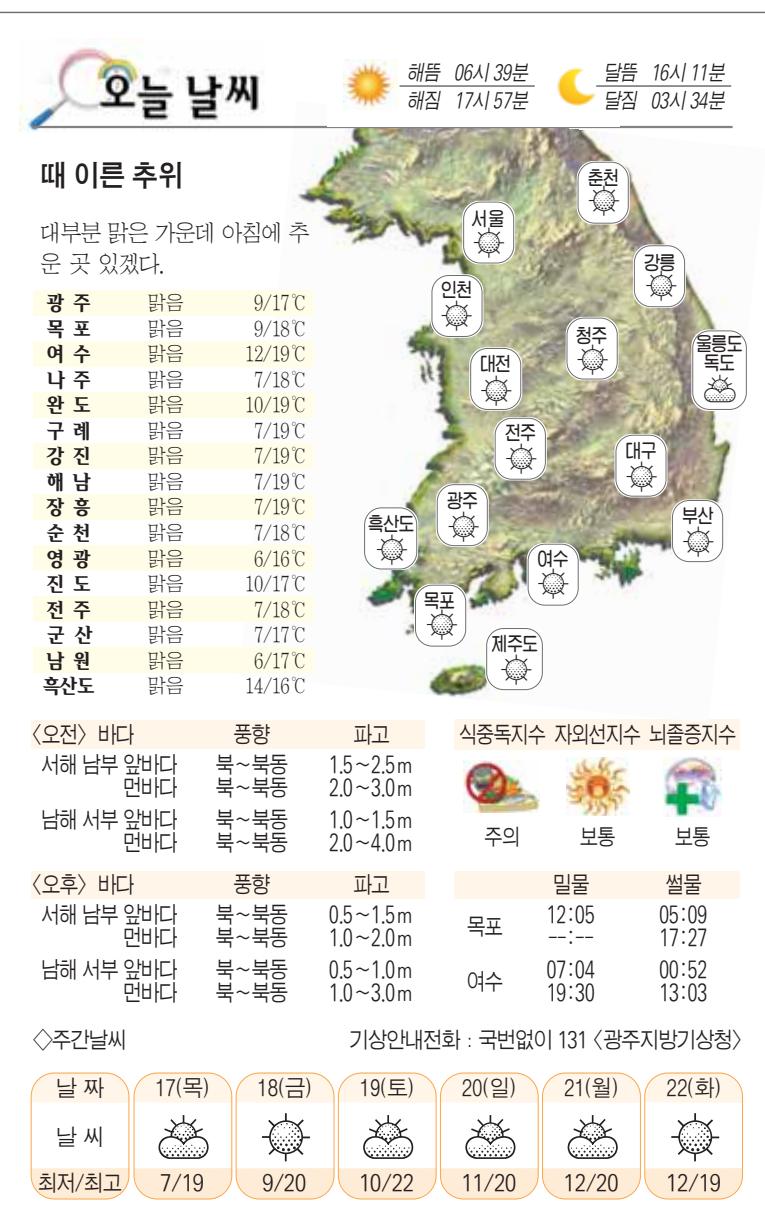
교과부(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김 교육감과

10일간의 날씨
미리 알수 있다

기상청 '예보단위' 확대

7일 단위로 예보되던 날씨 상황을 앞으로는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기존에 7일 제공되던 주간에 예보 서비스를 개편해 예보 기간을 3일 늘리고, 예보명칭도 종전의 '주간예보'에서 '중기예보'로 변경, 하루 2차례씩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저·여가 활동 등 주말 일정, 산업체는 생산 계획 수립 등의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기대했다. /박정렬기자 halo@



결핵협회 창립 60주년 '베스트10 씰' 선정

광주·전남 각계 모금운동 전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지회장 김용억)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근 발행된 2013년 크리스마스 씰로 지역사회 각계의 결핵퇴치를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국내에서 발행된 씰 중 베스트10을 선정해 만들어졌다. <사진>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76%

"고용주 폭언·욕설 경험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보고서

하지 않고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4명 중 3명은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75.8%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고 이 중 87.7%는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문·심층면접·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문·심층면접·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결핵으로 많은 사람에게 발생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마을 우체국 장이던 아이날홀벨이 우편물에 쌓이는 우편물에 저렴한 가격의 씰을 붙이고, 수익금을 결핵퇴치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왕의 허락을 받아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76%

"고용주 폭언·욕설 경험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보고서

하지 않고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4명 중 3명은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75.8%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고 이 중 87.7%는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문·심층면접·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문·심층면접·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문·심층면접·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